

大學別 出題의 限界論的 展望

金 滌 採

(啓明大 心理學科)

1. 問題의 提起

'88학년도에는 大學 入學 學力考査의 문제를 中央教育評價院에서 공동으로 출제하고 고사의 시행, 채점, 査定이나 발표 등은 각 대학에서 관장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個別大學에서 大學別 出題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잘 다듬어져 귀에 익은 大入 關係 用語로는 '大學 本考査' 또는 '學校 管理制'의 문제점 정도가 쉽게 聯想되는 내용이다.

우선 大學 入學 銓衡制度를 운위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의 참조 준거를 간추려 보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사실 우리는 解放 以後 大入制度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어떤 때는 혁명적이고 어떤 때는 부분적인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바뀌지 아니한 해가 없는 셈이며, 그것은

때로는 大學이나 중등 학교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또는 문화적·사회적 요청과 타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언제나 改善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곤 하였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어려우며 사실 그러한 理想의인 大入制度란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대입 제도 개혁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첫번째의 참조 준거는 大入制度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대입 제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最善의 制度'를 채택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최선의 것인가? 思考의 참조 준거는 大入制度의 原則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근사한 물음은 '그것은 바라는 方向으로의 최선의 制度인가?'로 다듬어져야 한다. 原則에 따라서 長期的인 發展 模型으로 접근하는 변화일 때 관계자는 朝令暮改하는 비난을 받지 않

아도 되고 국민은 현기증을 느끼지 않고 인내와 협력을 기꺼이 할 것이다. 줄여 말하면 大入制度란 大學이 適格者를 선발하기 위하여 自律的인 裁量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해도 된다. 다만, 自律的인 權限을 보다 더 잘 수행하려면 수반되는 責任을 다하기 위하여 大入制度가 中等教育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의 가치 체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배려해야 하며, 어떠한 適格者가 적격자이며 어떤 절차가 社會正義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지 등을 따져야 할 것이다.

논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의 참조 준거는 單線的인 思考의 배경이다. 무릇 다른 많은 교육 문제들이 그러하듯이 사실 대입 제도는 개인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거꾸로는 社會的·文化的 一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 없이 이해 관계를 가지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기 마련이다.

설된 문제에 만병 통치약은 없는 법이다. 지원 절차, 시험 과목, 출제 관리, 문항 형식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학이나 중등학교, 그리고 보다 넓게는 사회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일거에 통쾌하게 해결하려는 것은 명쾌하긴 하지만 너무 단선적이며 흑백논리적이다.

‘새 大學入試制度 立案의 背景’을 설명한 어느 글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새 대학 입시 제도의 특징은 과거의 경직된 國家管理考査制가 갖는 문제점을 탈피하면서 出題의 專門性 및 高校 教育課程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별 單獨考査制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自律性의 伸張, 그리고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대학으로 하여금 個性 있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誘導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의 지원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필자는 주관식 문제의 출제가 어떻게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는지 또는 선시험·후지원제가 학생들로 하여금 적성에 따라 지원하게 하는 데 왜 순기능으로 작용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연결을 못시키고 있다. 大入制度가 功을 내세우기 위한 標의이 될 수도 없지만, 社會의 발달이 번번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을 요구할 만큼 未熟하지도 아니하다. 주장의 논리는 바라는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나 接近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그리고 論理的·實

證主義의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出題權의 前提를 살펴보고 실천적 제안 몇 가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2. 出題權의 前提

銜 資料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權利라 하여 出題權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써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권에 대하여 음미해 보아야 할 세 가지의 기본 전제들을 생각해 본다. 며칠 전 日刊新聞에는 현행 대입 제도를 '90 학년도까지 바꾸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聯合通信發의 기사가 보이는데 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 “문교부는 …현행 ‘선지원·후시험’ 대입 제도를 '90 학년도 대학 입시까지 바꾸지 않고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고 1, 2 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90 학년도까지는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서 계속 시행한 뒤 대입 전형 자율권을 '91년 이후 대학에 위임할 방침이다.” 이러한 진술문은 반성적 사유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첫째, 출제는 개별 대학의 고유 권한이다. 대입 제도란 개별 대학들이 교육하기에 適格한 新入生을 裁量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제1의 기본 원칙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입 전형 자료에는 출제를 하여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내신 성적이나 면접 같은

것도 있지만 大入 學力考査와 같은 것의 전형 절차 속에는 출제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大學 入試의 國家管理制라고 하더라도 출제권이란 여전히 個別大學의 고유 권한일 뿐이며, 따라서 문교부가 ‘대학에 委任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현실적으로 個別大學이 문교부에 委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인용한 신문 기사가 조금도 거슬림 없이 수용될 수가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문교부가 大學入試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기 때문에 문교부는 그것을 당연한 고유 업무처럼 知悉하게 된 것 같고, 개별 대학들은 그것을 위임해 본 기억은 고사하고 논의해 본 적도 없는 데 그 이유가 있을 성싶다. 自由主義 社會에서 더우기 自律化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대학 입시의 출제권은 개별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는 당연한 것같은 전제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조금은 어설피다는 생각이다. 個別大學 또는 大學間 協議體는 입시 문제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文教部는 주체의 자리에서 도와주는 助長의 자리로 옮겨가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출제는 專門의인 일이다. 출제권이 개별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여 입시의 출제가 반드시 개별 대학 또는 대학간 협의체에 의하여 責任 없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은 專門의인 일이며, 각 분야에서 專門家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건강한 사회이듯이 출제권의 실제 행사에서도 專門性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어떠한 適格者가 적격자인지를 묻은 바도 있지만, 고교 등 하급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잘 반영하는 信賴가 가고 妥當한 문제를 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준비가 된 대학은 거의 없다. 출제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大學 入試처럼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더욱더 그렇다. 따라서 평가 전문가들이 같이 일하는 평가 전문 기구가 필요해지는데 中央教育評價院은 그 보기가 되겠다. 個別大學 또는 大學間 協同體는 자기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責任으로 부담이 되는 출제의 일을 이들 전문적인 평가 기구에 위임하고 專門의 奉仕를 받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출제권에 대한 정부의 관여란 물론 상상할 수 없고 대신 출제를 하고 고사를 치뤄 전형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ETS 등의 평가 전문 기구의 전문적 봉사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다만 대입 학력고사의 경우 文敎部가 中央教育評價院에 출제를 위임한 것이지 결코 大學들이 委任한 것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學力考查 出題의 '무엇을·어떻게'에 대하여 대학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전개되는 논리는 國家管理制와 學校管理制 出題라는 양극을 단선적으로 내왕하기 쉽다.

세계, 출제는 計劃的인 것이어야 한다. 大學 入試는 대학이 하든지 國家가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되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다. 能力 있고 노력한 사람이 大學教育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適格者로 선발될 수 있게 하려면 大學의 自律性이 존중되고 內容의 專門性이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計劃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신문 기사를 다시 보면 "90학년도까지는 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 시행한 뒤 대입 전형 자율권을 '91년 이후 대학에 위임할 방침이다"라고 하였다. 왜 '91년까지는 안되다가 그때가 되면 갑자기 가능한가? 그 사이 어떤 단계의 어떤 조치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 진척될 예정이며, 그러한 진로가 성취된다면 '91년도는 대입 전형 자율권을 대학에 위임하겠다는(사실은 대학이 고유의 권한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겠지만) 식이 아니라면 문교부가 심술 꾀은 시어머니의 인상을 떨치지 못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대입 제도는 좀처럼 성숙한 모습을 찾아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敎育改革審議會의 '大學 入試制度의 改善案'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며 또한 이어진 주제 논의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여기에서 관계 부분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 보았으면 한다. "90년대 중반부터는 個別大學이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入學 銓衡制度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자율화 단계에서는 개별 대학이 학생 선발의 준거로 고등학교, 대학, 제3의 기구 또는 정부 기관 등이 실시한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형 자료를 다양화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하여 領域別 考查, 實技考查, 口述考查, 面接法 등의 독자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로는 '中央教育評價院을 特殊法人化하여 '90년대 초반까지 大學教育 適性試驗을 개발하며 學力考查는 大學別 評價로 발전시킨다.' '學力考查는 中央教育評價院이 관리하되 희망하는 대학의 경우 자체 출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개발될 大學教育 適性試驗은 고등학교의 교과별 학력을 평가하기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능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등에 의한 基本的 學業 適性의 평가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의 활동 성적 등 출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전형 자료의 개발·활용도 격려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해 보게 된다.

3. 實踐의 提案

大入試驗의 출제를 大學別로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하지만 지금 필자는 가능한 또는 현실적인 문제점의 나열을 시도하지는 않으려 한다. 대신

대입 시험의 출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또는 다소간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努力들을 실천적 제언의 형태로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하며, 그리고 이러한 우회적 접근이 제기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제 필자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 본 바 있는 教育改革審議會의 대학 입시 제도 개선안을 發展의 模型으로 인식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出題權에 대한 세 가지의 전제와 대입 전형 제도 논의에 대한 두 가지의 참고 준거를 잊지 않으면서 대입 시험 출제와 관련한 몇 가지의 제언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文敎部는 大學 入試에 대한 主管者의인 기능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이지만 그것은 문교부의 功過나 效率性 따위에 맡기어 놓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학 입시 절차란 바로 개별 대학들의 권한이요 책임임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의 自律的인 그러나 責務的인 전형 노력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지금껏 문교부가 맡았던 업무·기능 등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같은 大學間 協議體 또는 하부적으로는 國·公·私立大學協議體나 大學區別 大學發展委員會 등에 이양한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만간, 그러나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지만, 이때 大學別 評價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어 갈 것이며 거기에는 출제의 문제를 당연히 포함할 것이다.

둘째, 개별 대학의 적격한

신입 학생의 평가 능력은 크게 제한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각 대학의 대입 고사 관리 능력은 현재의 대입 학력고사는 물론이고 더우기 大入制度의 발전 방향을 기준하여 보면 크게 부족하며 앞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대입 학력고사를 대학별 출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찌하면 ‘大學別 本考查’ 부활이란 말로 더 잘 표현될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이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등학교 수준에 알맞은 문제를 信賴롭고 妥當하게 출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별 출제 유형과 수준 등에 격차와 偏倚를 가져오며, 그리고 그 결과 정의로운 전형이 되기 어렵고 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 초래되고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A大班, B大班 등의 大學別 學級 編成의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過熱 課外 또는 課外 授業이 더욱 부체될 지리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두번째는 대학에 따라서는 대입 학력고사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고사 과목별 출제 교수가 없어서 단독 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출제 교수를 일시 차출한다면 대학 교수의 출제만으로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알맞은 문제를 내기가 어려운, 앞서 지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은 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봉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교육

평가원을 확대·개편하고 장기적인 평가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소위 大學別 本考查라고 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大入 學力考查를 대학별로 단독 출제한다면 부수될 보다 심각한 문제는 大入制度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기준해 보았을 때이다. 앞에서는 대입 제도의 개선 노력은 미래적인 發展 模型을 지향하여 계속적·계획적으로 接近해 가면서 사회적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이지 통찰적으로 정답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敎改審의 개선안에는 대입 학력고사를 점차 ‘大學教育 適性試驗’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소계열별·학과별 특성을 강조하며 論述考查나 面接 등 넓은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大學別 評價를 발전시키기로 하고 있다. 適性이란 學力과 다른가라는 의문을 포함하여 정의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육 적성 시험은 형식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습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는 다소간은 종합적이고 일반적이며 범교과적인 能力을 측정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개발이 계속되고 결과들이 누적됨에 따라 敎科領域別 適性檢査로, 그리고 결국에는 汎敎科的인 것으로 발전해 간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학교육 적성 시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 그것은 고등학교의 形式教育에 덜 관련되며 그 리하여 중등 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와질 것이다. 또한 고등학

교 내신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 입학 학력고사와 더불어 교과서 중심의 학업 성취도를 二重査定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이수 결과를 평가하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교육평가원이 특수법인화되고 차출된 인력이 한 달 정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것으로 可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서 조감해 본다면 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학력고사의 출제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앞에서 인용한 敎改審 案은 통과된 원안의 것이지만 소위 최종 종합 조정 심의를 거친 修正 內容은 體系的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90년대 초반까지 '大學教育 適性試驗'을 개발하고 大入 學力考查는 '大學別 評價'로 발전시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별 평가는 大學別 考查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조정 심의 이전처럼 學力考查는 대학교육 적성 시험으로 발전되어 가고 그 이외 개별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충적으로 '대학별 평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학교육 적성 시험을 개발하려는 목표 내지 적성 시험과 학력고사, 그리고 내신 성적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네째, 大學別 評價를 시작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入試의 출제권이 대학의 고유 권한임과 더불어 평가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은 개별 대학이 신입생 선발을 위한

銓衡資料의 생성·수집에 참여하는 측면이 아예 없다는 말로 비쳤을지도 모르겠다. 대학별 평가는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敎改審 案에서처럼 소계열별 내지 학과별 특성을 강조하는 '개별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하여 領域別 考查, 實技考查, 口述考查, 面接法 등의 독자적인 補完策'을 포함하여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우선 정의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대학별 평가는 시작·확대·격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면 현재 어떤 내용의 大學別 評價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뀌어진 '88학년도 大入 銓衡制度에 대하여 세 가지만 언급해 보려고 한다.

첫째, 필자는 汎教科의인 내용으로 고차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작 단계에 있던 論述考查를 폐지해 버린 일을 의문해 붙은 물론 主觀式問題 30% 내외의 출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고등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고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킨다는 배경 논리는 피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주관식이라고 하여(사실은 選擇型에 대비하여 簡答型이라 해야겠지만) 올해에 출제된 바 있는 完成型과 短答型을 기억해 보자. 그 정도 문제에서 요구되는 정신 기능쯤은 客觀式(선택형) 문제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체점을 하고도 남을텐데 굳이 주관식이란 형식으로 하여 며

칠씩 全敎授들을 동원하여 채점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선지원·후시험 제도가 適性 爲主의 진학을 유도하고 각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基準과 管理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입장에 필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선시험·후지원에서 과생하는 문제는 선지원·후시험이란 반대편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 과정을 거치는 데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단선적 사고의 배경이라는 두번째의 참고준거에도 위배되므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先試驗'의 결과만에 의하여 '後志願'의 승·不合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우기 '先試驗'의 결과뿐만 아니라 '後志願'하고 치를 수 있는 '大學別 評價'의 결과도 합·불합격의 판정에 중요하다면 志願 節次에 따른 문제는 해결 또는 완화될 것이란 假說을 제기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學力考查 出題를 中央教育評價院이 前·後期別 및 專門大學別로 나누어 하고 그 이외의 일은 대학이 맡아서 하는 절차는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출제 작업상의 난점, 대학 학사 일정 추진상의 에로 및 수송·보관상의 높은 위험 부담 등이 심각하게 지적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서 제기한 가설이 만약 타당하다면 현재의 실체는 공연히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제 어떤 內容의 大學別 評價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원리의 질문으로 되돌아 가본다. 그리고 몇 가지의 試案的인 해답을 도모해 보기로 한다.

첫째, 새 大入制度에서 面接을 점수화할 수 있게 하었는데 이러한 조치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발표 대회나 경시 대회를 통하여 나타난 英才나 特技 成績을 이용하는 등 전형 자료의 다양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論述考查的인 성격의 평가를 대학이 자유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이러한 내용의 대학별 평가는 소계 열별 내지 학과별 특성을 강조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大入 學力考查는 중앙 교육평가원이 계속하여 관리·출제하되 연 1회 공동으로 실시하며, 문항 형식은 모두 컴

퓨터 채점이 가능한 객관식으로만 한다. 물론 공통적인 大入 學力考查의 실시와 결과 발표는 개별 대학 지원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主觀式 問題에 대한 출제는 모두 個別大學에 일임하고 문항 형식은 단답형이나 완성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論文型으로만 한다. 논술 고사적인 평가와 논문형의 학력고사는 개별 대학을 지원한 후 대학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學力考查의 全 考查科目에서(또는 영역별로) 비율을 조정하여 논문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또는 학력고사의 必須科目만은 문항 형식에 관계없이 전부 大學別 評價로 일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필자는 당분간 國語, 英語, 數學 등 道

具的인 必須科目에 한하여 일정 비율만 논문형으로 대학별로 주관·출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형 학력고사도, 특히 대학 교육 적성 시험이 개발됨에 따라 무리없이 두번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논술고사적인 대학별 평가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大入制度만큼 국민의 큰 관심을 끄는 이슈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큰 사회 체제의 일부인 대학 체제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작용하고 작용받는 변인은 참으로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發展的 模型으로의 접근은 조용히 그러나 계속적·계획적인 과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다시 믿으면서 굳결 없이 이어진 思考를 기대해 본다. *

教員當 學生數 目標

(單位: 名)

區 分	韓 國		日 本 (1985)	美 國 (1985)	西 獨 (1986)
	1980	1986			
幼 稚 園	19.9	30.0	15.5		
國 民 學 校	47.5	37.9	30.0	24.1	19.8
(6大都市)	(62.6)	(52.7)	(32.0)		
中 學 校	45.1	38.4	22.0	21.0	
高 等 學 校	33.3	31.1	20.0	19.4	15.5
專 門 大	28.8	38.8	19.0	20.9	14.3
大 學	27.9	35.2	18.0	16.5	13.0

出處: 「教育改革綜合構想」(教育改革審議會, 1987. 12)